

# BK21과 시장원리

글 | 조동현 \_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cho@korea.ac.kr

매년 봄이면 전국 주요 대학의 거의 모든 과에서 한바탕 난리법석이 벌어진다. 과의 규모에 따라 작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열 명이 넘는 교수들이 한 달여 동안 연구와 교육을 접어두고 BK21 사업 연차보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교육, 연구, 특성화 각 영역에서의 기초자료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수십 개의 표를 만들고, 잘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랑과 변명의 논리를 개발하고, 빠지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없는가를 점검하다보면 한 달이 모자라고, 교수 열 명이 부족하다. 지금 연구실 책꽂이에 꽂혀있는 우리 과 2차 연도 연차보고서는 두께가 7cm에 달한다.

모든 과들이 연차보고서 작성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BK21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에 과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교수 22명에 총 1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있는 우리 과의 경우,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BK21사업으로부터 매년 8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 대학원생 100명의 1년 등록금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이 있고 없고는 우수학생 유치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원 교육을 위해서 이처럼 막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고마운 일이며, 특히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할 때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고서 작성과 지원금 집행에 직접 관여하고 그 평가과정을 지켜보며, 이제 10년째에 접어든 BK21사업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 일률적 잣대에 의한 임의적 평가로 부작용 커

첫 번째 문제는 평가 잣대의 임의성과 그에 따른 교육현장에서의 왜곡현상이다. 현재의 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교육, 연구, 특성화의 3개 영역에 걸쳐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대해 위원회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량 또는 일부 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개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점수평가가 늘 그렇듯이 다양한 학문분야와 각 과가 가지는 전통과 특성이 무시된 일률적 평가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연구의 양과 질을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항목이다. 물리학의 경우, 입자물리학 실험 분야처럼 100명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연구해서 매년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두세 명의 연구자가 작은 규모의 실험을 통해 매년 수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 경우 평가 규칙에 따라서는 입자물리학 실험분야가 큰 혜택을 보기도 하고,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지난 수년 간 이 항목의 평가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각 과의 희비가 갈렸으며, 이는 교수 채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문의 균형발전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런 예는 물리학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고, 건축과 토목, 전자공학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한 범주에 들면서도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연구 분야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나타난다. 다른 특성을 가진 연구 분야를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면 어느 분야는 불이익을 당



할 수밖에 없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평가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일률적 잣대에 의한 임의적인 평가는 비단 연구역량 평가뿐 아니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사한 문제를 가져온다.

두 번째 문제는 평가과정에서의 과도한 행정수요이다. BK21 평가를 위한 보고서는 그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보고서 작성에서 발생한 오류는 평가과정에서 치명적인 감점으로 이어지곤 한다. 수백 쪽의 보고서를 오류 없이 작성하는 일은 초인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특히 많은 과에서 젊은 교수들이 동원되며, 이들이 교육과 연구에 바칠 수 있었던 시간과 노력을 방대한 보고서 작성과 그 보고서의 작은 오류를 찾기 위해서 허비하는 것을 생각하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문제는 BK21사업의 참여에 한 과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점이다. 즉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이라는 점이다. 1, 2점 차이로 탈락된 과는 수 년 동안 BK21에서 탈락했다는 불명예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잘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이는 당연한 일이고, 이 기간을 와신상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잠재력을 가진 과를 임의적 잣대에 의한 작은 차이 때문에 사장시킬 수도 있다. 더구나 이런 과에 속한 교수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 학생에게 지원금 배분 맡기는 '바우처 제도' 제안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현재 BK21이 가지고 있는 대학원 수준의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지원금의 배분을 정부가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일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정부는 학계와 함께 국가의

지원으로 대학원 교육을 받을 국가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어디에서 교육받고 연구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바우처 제도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어느 교수가 가장 뛰어난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하는가를 몇몇 정부 관료와 교수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지 말고, 실제로 그 연구실에서 교육받고 연구할 수요자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 지원을 받는 대상이 학생임을 고려할 때, 교수를 평가해서 학생을 지원하는 현 제도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장학생선발을 위해서는 대학재학시의 성적, 영어능력, 혹은 미국의 GRE와 같은 시험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매년 혹은 매 학기 국가장학생을 고객으로 하는 전국 대학원 연구실의 큰 장이 설 것이다. 장학생들은 현재 BK21사업 보고서에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과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실의 연구 활동과 업적, 그간 배출된 졸업생의 진로는 물론,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각 과의 전통이나 교수의 학생교육을 위한 열정 등도 고려해서 대학과 연구실을 결정할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평가가 가장 합리적인 것은 아니며, 우리 실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의 서열이나 당시의 학문적 유행에 휩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이 갖는 이런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평가는 현재의 획일적인 위원회식 평가보다는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제도 아래에서는 과 단위가 아닌 연구실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매년 혹은 매 학기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 단위로 수년 동안의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와 같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이 갖는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다. 경쟁의 단위가 작고, 평가의 주기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 집단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연구역량 면에서 비교적 열세인 대학에 속한 교수라도, 개인의 연구능력이 뛰어나면 그에 따라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 아래에서는 교수들이 보고서 쓰느라고 소비해야 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연구와 교육에 쏟아 부을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사업단 선발을 대신하는 장학생 선발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겠지만, 이는 전국의 교수들이 모두 나서서 할 일은 분명 아니다. 필자를 비롯한 교수들이 7cm 두께의 보고서를 쓰는 대신,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토론하는데 시간을 쏟을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본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콜로라도 주립대학 JILA 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1994년부터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다.